질문으로 읽고, 문제로 확인하는 개념 학습지

북한을 어떻게 이해하고 바라볼 것인가?

1부	분단의 과정과 북한을 보는 기준	Q01~Q08
2부	북한 체제와 주민 생활	Q09~Q22
3부	북한 이탈 주민과 함께 살아가기	Q23~Q28
확인	확인 문제 36문항	각 부 뒤
해설	정답과 해설	맨 뒤

© 대치동 재우쌤 | 010-9524-4849 | https://leessaem.com/ | https://blog.naver.com/leessaem84

본 자료는 직접 제작한 학습 자료입니다. 개인 학습을 위한 열람·인쇄는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무단 복제·재배포·수정 후 재배포 및 상업적 이용을 금합니다.

한눈에 전체 개념 지도

북한의 체제와 주민의 생활을 사실에 근거해 이해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평화·인권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북한 이탈 주민과 함께 살아가는 일도 사회 통합의 과제이다.

알기에서 판단으로, 함께 살아가는 삶으로

알기

1부 분단의 과정과 북한을 보는 기준

1-A 분단은 어떻게 생겼나	Q01~Q05
1-B 북한을 어떤 눈으로 볼까	Q06~Q08

2부 북한 체제와 주민 생활

2-A 정치	Q09~Q10
2-B 경제	Q11~Q13
2-C 사회·문화	Q14~Q15
2-D 인권	Q16~Q18
2-E 주민 생활	Q19~Q21
2-F 주민을 보는 태도	Q22

↓

판단하기

네 가지 도구로 사실을 살피고, 보편적 가치로 판단한다.

↓

함께 살기 · 3부 북한 이탈 주민과 함께 살아가기

3-A 누구이며 무엇이 어려운가	Q23~Q24
3-B 어떻게 함께 살까	Q25~Q28

판단 도구 4개

① 적힌 것·내세운 말 ≠ 실제 생활
② 일부 ≠ 전체
③ 원인을 이해함 ≠ 옳다고 인정함
④ 당국·체제 ≠ 주민 한 사람 한 사람

1부 분단의 과정과 북한을 보는 기준

1-A 분단은 어떻게 생겼나 Q01~Q05

Q01 남한과 북한은 원래부터 서로 다른 나라였나요?

남북 분단 이전에는 오랜 역사와 문화를 함께해 왔다. 현재의 분단은 광복 이후의 국제 정세와 내부 갈등 속에서 생겼다.

1945년 광복은 일본의 식민 지배에서 벗어난 사건이다. 그러나 광복과 동시에 한반도 전체에 하나의 정부가 세워진 것은 아니다. 미국과 소련이 북위 38도선을 경계로 남쪽과 북쪽에 각각 진주(군대가 들어와 머무름)했고, 서로 다른 정치 체제(정치가 운영되는 틀과 방식)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

광복 ≠ 통일 정부 수립
광복 뒤에도 어떤 나라를 세울지를 둘러싼 갈등과 분단의 과정이 이어졌다.

Q02 분단은 외국 때문에 생겼나요, 우리 내부의 갈등 때문인가요?

국제적 요인과 민족 내부의 요인이 함께 작용했다. 어느 한쪽만으로 모두 설명하기 어렵다.

구분	무엇이 작용했나?	쉽게 이해하면
국제적 요인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만나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 미국과 소련의 대립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의 이해관계가 충돌함
민족 내부의 요인	독립운동 세력의 분열, 신탁 통치에 대한 찬반 대립, 정부 수립을 둘러싼 이념(사회를 어떻게 만들고 운영할지에 관한 생각) 갈등	하나의 정부를 세울 정치적 합의를 이루기 어려웠음

지정학적 위치는 지리적 위치가 국제 정치와 안보에 영향을 주는 것을 말한다. 한반도가 대륙과 바다를 연결하는 곳이라는 점이 강대국의 이해관계와 얽혔다.

신탁 통치는 국제기구의 감독 아래 특정 국가가 일정 기간 한 지역의 통치를 맡는 방식이다. 광복 뒤 한반도에 이를 적용하는 문제를 두고 찬반 갈등이 일어났다.

6·25 전쟁은 이미 시작된 분단을 더욱 굳히고 상호 불신을 깊게 만들었다. **분단이 처음 생긴 때와 분단이 굳어진 때를 구별한다.**

Q03 지리적·정치적·심리적 분단은 각각 무슨 뜻인가요?

> **영역이 나뉜 것, 별도의 정부가 선 것, 서로를 적대하고 불신하게 된 것을 구별하는 말이다.**

사건의 순서와 분단의 뜻을 연결한다

1945년	**광복 뒤 분할 점령** 서로 다른 점령 구역으로 나뉨	지리적 분단 (국토 분단)
↓		
1948년	**남북의 별도 정부 수립** 다른 정부와 정치 체제가 들어섬	정치적 분단 (체제 분단)
↓		
1950년	**6·25 전쟁 발발** 전쟁 피해로 적대감·불신이 깊어짐	심리적 분단 (마음의 분단) 심화
↓		
1953년	**정전 협정** 전투는 멈췄지만 군사적 대치 지속	분단이 굳어짐 (정전)

전쟁 전에도 갈등은 있었고, 전쟁으로 불신이 더욱 깊어졌다.

지리적 분단(국토 분단)·정치적 분단(체제 분단)·심리적 분단(마음의 분단)으로 연결해 이해할 수 있다. 괄호 안은 앞의 용어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풀어 쓴 말이다.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의 남침으로 전쟁이 시작되었다. 1953년 정전 협정 뒤에는 군사 분계선을 사이에 둔 군사적 대치(서로 맞서 버팀)가 이어졌다.

이 단계 구분은 **각 사건이 무엇을 크게 바꾸었는지**를 보여 준다. 전쟁 전에는 갈등이 전혀 없었다거나, 한 단계가 끝나야 다음 문제가 처음 생겼다는 뜻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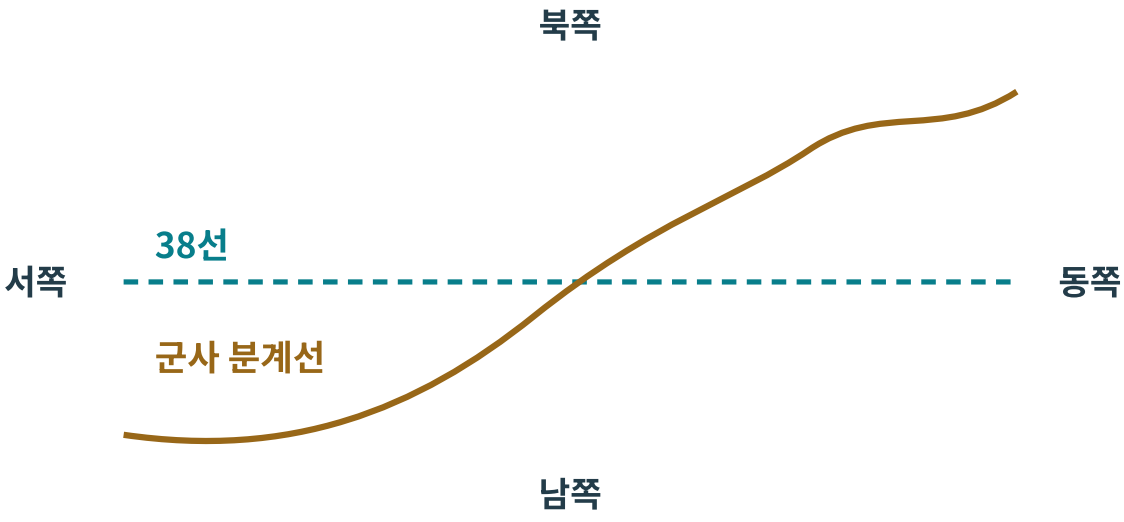
Q04 38선과 휴전선은 같은 선 아닌가요?

> **다르다. 38선은 위도를 기준으로 한 선이고, 흔히 휴전선이라고 부르는 군사 분계선은 정전 협정에 따라 정한 군사적 경계선이다.**

비교	38선	군사 분계선·휴전선
기준	북위 38도라는 위도	정전 당시 양측의 군사적 접촉선
관련 시기	1945년 광복 직후 남북 분할 점령	1953년 정전 협정
모양과 위치	같은 위도를 이은 선	지형과 전선에 따라 굽어진 선
기억할 점	현재의 군사 분계선과 일치하지 않음	서쪽에서는 38선보다 남쪽, 동쪽에서는 38선보다 북쪽을 지남

두 경계선의 위치 비교

방향과 두 선의 관계를 단순화함 · 실제 지도가 아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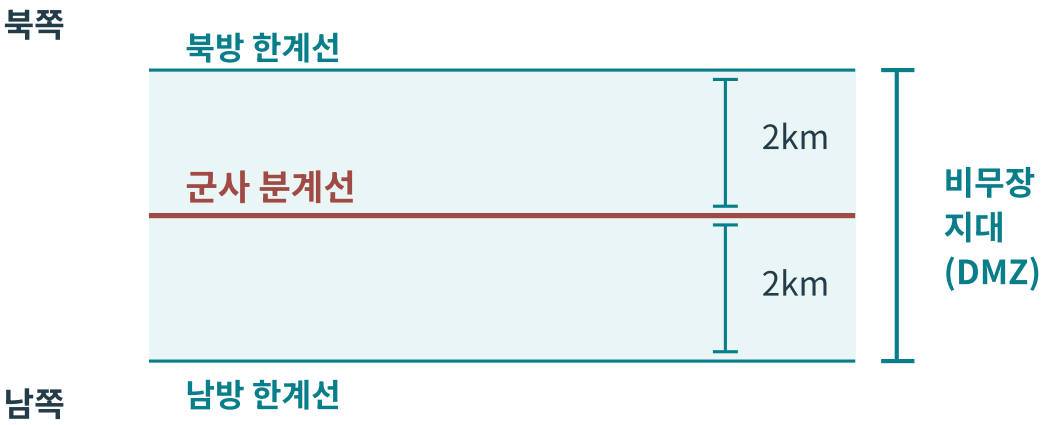
38선: 1945년 분할 점령 · 북위 38도 기준

군사 분계선: 1953년 정전 · 당시의 군사적 접촉선 기준

군사 분계선을 기준으로 남북 양측이 각각 2km씩 물러나도록 하여 **비무장 지대(DMZ)**를 설정했다. 비무장 지대는 선 하나가 아니라 양측 군대 사이의 충돌을 줄이기 위해 둔 **구역**이다. 설정 원리를 식으로 쓰면 **2km + 2km = 폭 4km의 구역**이다.

군사 분계선은 선, 비무장 지대는 구역

정전 협정의 설정 원리를 단순화한 개념도 · 실제 지도가 아님



선 하나(군사 분계선)를 기준으로 양쪽 2km씩
2km + 2km = 폭 4km의 구역(비무장 지대)

도식은 선과 구역의 관계를 단순화한 것이며 실제 지도를 나타내지 않는다.

38선 ≠ 군사 분계선 / 군사 분계선 ≠ 비무장 지대 전체
생긴 시기·기준을 구별하고, 선과 구역을 구별한다.

Q05 휴전했으면 전쟁이 완전히 끝난 것 아닌가요?

정전·휴전은 싸움을 멈춘 것이며, 전쟁을 끝내는 종전과 같은 뜻은 아니다.

전쟁(1950) → **정전·휴전(1953, 전투를 멈춤·현재도 정전 상태)**

남은 과제: 종전과 안정적인 평화 체제 마련

1953년 정전 협정으로 대규모 전투는 멈췄지만, 그것만으로 전쟁을 끝내고 평화로운 관계를 지속할 제도와 약속까지 완성된 것은 아니다. 정전 체제 아래에서 평화를 유지하고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정전·휴전 ≠ 종전
전투를 멈춘 합의와 전쟁을 끝내는 일을 구별한다. 종전만으로 안정적인 평화가 저절로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1-B 북한을 어떤 눈으로 볼까 Q06~Q08

Q06 북한은 경계해야 하나요, 협력해야 하나요?

북한은 경계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협력의 대상이다.

경계해야 할 것	협력할 수 있는 일
평화를 위협하는 군사적 행동, 사람들의 안전을 해치는 위협	충돌 방지를 위한 대화, 인도적 문제(사람의 생명·고통과 관련된 문제) 해결, 평화로운 교류

안보는 사람들의 생명과 국가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군사적 위협을 살피고 대비하는 일은 중요하다. 동시에 우발적 충돌(뜻하지 않게 일어난 충돌)을 줄이는 대화나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협력도 평화를 위한 노력이 될 수 있다.

북한 당국의 정책을 비판하는 것과 북한 주민 모두를 미워하는 것은 다르다.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부 정책을 똑같이 지지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도구 ④ 당국·체제 ≠ 주민 한 사람 한 사람
군사적 위협에는 대비하되, 주민 개인의 생각과 삶을 당국의 정책과 같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Q07 북한을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은 북한의 말을 전부 믿으라는 뜻인가요?

아니다. 감정이나 선입견보다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사실에 근거해 이해하자는 뜻이다.

어떤 영상에 고층 건물이 보인다고 모든 주민이 풍족하다고 결론 낼 수 없다. 어려운 지역의 모습만 보고 모든 주민의 생활이 같다고 단정해서도 안 된다. 자료가 **언제, 어디서, 누구에 의해 만들어졌는지**, 다른 자료에서도 확인되는지를 살펴야 한다.



장면: 학생들이 서로 다른 지역의 사진과 설명 자료를 비교하고 있다.

북한 당국의 발표, 주민의 경험, 연구·조사 자료는 각각 무엇을 보여 주고 무엇을 보여 주지 못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경험담 하나는 소중한 자료이지만 모든 사람의 경험을 대표하지는 않는다.

도구 ② **일부 ≠ 전체**
자료의 근거와 범위를 확인한 뒤 판단한다.

Q08 북한의 상황을 이해하면 인권 침해도 받아들여야 하나요?

> **아니다. 상황을 이해하는 것과 잘못을 정당화하는 것은 다르다. 보편적 가치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보편적 가치는 나라나 출신이 달라도 모든 사람에게 중요하게 여겨야 할 가치이다. 인간의 존엄성, 생명 존중, 자유, 평등, 인권, 평화 등이 이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어떤 행동이 강한 통제 아래에서 나온 이유를 설명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 이유를 알았다고 해서 사람을 부당하게 가두거나 신앙 때문에 처벌하는 일이 옳아지는 것은 아니다.

도구 ③ **원인을 이해함 ≠ 옳다고 인정함**
어떤 일이 생긴 이유를 설명해도, 그 일이 옳은지는 별도로 판단한다.

판단 도구 4개

도구 이름	한 줄 뜻	예
① 적힌 것·내세운 말 ≠ 실제 생활	제도·구호와 실제로 누리는 권리·생활을 구별한다.	무상 교육이라는 이름과 학용품 부담은 따로 살핀다.
② 일부 ≠ 전체	한 장면·한 사람으로 모두를 단정하지 않는다.	상점 영상 하나로 모든 주민의 생활을 판단하지 않는다.
③ 원인을 이해함 ≠ 옳다고 인정함	어떤 일이 생긴 까닭을 알아도 옳은지는 별도로 판단한다.	통제의 배경을 알았다고 인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는다.
④ 당국·체제 ≠ 주민 한 사람 한 사람	당국의 정책과 주민 개인의 생각·존엄성을 구별한다.	정책을 비판하면서 주민의 인권은 존중한다.

확인 문제 1부 분단의 과정과 북한을 보는 기준 01~09

01 다음 사건을 일어난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한 것은?

(가) 남북에 별도의 정부가 들어섰다.
(나) 정전 협정에 따라 군사 분계선이 정해졌다.
(다) 미국과 소련이 38선을 경계로 남북에 각각 진주했다.
(라) 북한군의 남침으로 6·25 전쟁이 시작되었다.

① (다) → (가) → (나) → (라)
② (다) → (라) → (가) → (나)
③ (가) → (다) → (라) → (나)
④ (나) → (다) → (가) → (라)
⑤ (다) → (가) → (라) → (나)

02 분단의 국제적 요인에 해당하는 것만을 고른 것은?

ㄱ.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의 이해관계가 한반도에서 마주쳤다.
ㄴ. 우리 내부에서 신탁 통치에 대한 찬반 대립이 일어났다.
ㄷ. 미국과 소련이 서로 다른 체제와 영향력을 확대하려 했다.
ㄹ. 독립운동 세력들이 하나의 정치적 입장으로 결집하지 못했다.

① ㄴ, ㄹ ② ㄱ, ㄷ, ㄹ ③ ㄴ, ㄷ, ㄹ ④ ㄱ, ㄷ ⑤ ㄱ, ㄴ

03 다음 설명에서 특히 강조한 분단의 측면은?

전쟁으로 가족을 잃거나 고향을 떠난 사람들의 상처가 커졌다. 남북 주민 사이에서 상대를 향한 적대감과 불신도 깊어졌다.

① 군사적 대치 ② 지리적 분단 ③ 심리적 분단 ④ 정전 ⑤ 정치적 분단

04 **38선과 군사 분계선을 비교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38선은 1953년에, 군사 분계선은 1945년에 정해졌다.

② 두 선은 이름만 다를 뿐 처음부터 끝까지 일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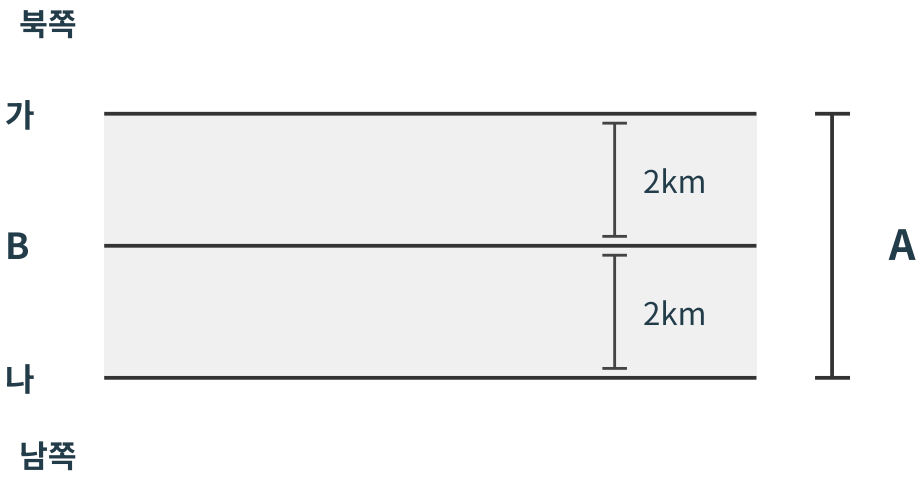
③ 38선이 정해지기 전에 남북의 별도 정부가 먼저 수립되었다.

④ 38선은 위도가 기준이고, 군사 분계선은 정전 당시의 군사적 접촉선을 바탕으로 정해졌다.

⑤ 군사 분계선은 38선보다 항상 남쪽에 있다.

---

05 **다음은 정전 협정으로 설정한 구역을 단순화한 개념도이다. 이를 바르게 설명한 것은?**



실제 지도가 아니며, 위쪽이 북쪽이다.

① 가·나는 모두 1945년에 정한 38선이다.

② A 전체는 너비가 없는 하나의 선이다.

③ 가·나 사이의 A는 비무장 지대이고, 그 안의 B는 군사 분계선이다.

④ B는 남북 주민이 자유롭게 통행하는 도로를 뜻한다.

⑤ A가 생겼다는 사실만으로 전쟁이 종결되고 평화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

06 **분단의 이름과 대표 사건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① 심리적 분단(마음의 분단)의 심화 — 1950년 6·25 전쟁과 그 피해

② 심리적 분단(마음의 분단)의 심화 — 1945년 점령 구역의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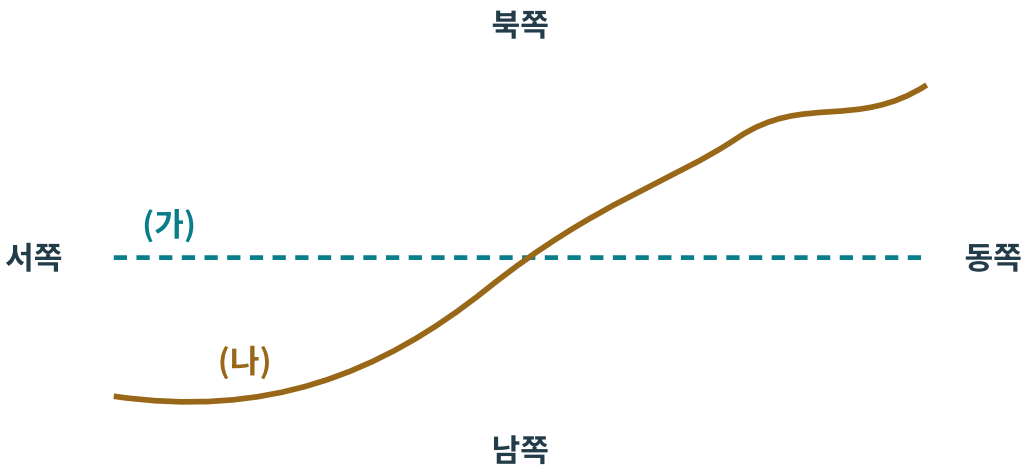
③ 정치적 분단(체제 분단) — 1945년 38선을 기준으로 한 분할 점령

④ 정치적 분단(체제 분단) — 1953년 정전 협정에 따른 전투 중지

⑤ 지리적 분단(국토 분단) — 1948년 남북의 별도 정부 수립

---

07 **그림은 서로 다른 시기에 생긴 두 경계선 (가), (나)를 단순화한 것이다.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실제 지도가 아니며, 위쪽이 북쪽이다.

① (가)는 북위 38도라는 위도를 기준으로 분할 점령 구역을 나눈 선이다.
② (나)는 같은 위도의 지점들을 연결하여 정한 직선이다.
③ (가)와 (나)는 1948년 별도의 정부를 세울 때 함께 설정되었다.
④ (가)는 1953년에 정전 당시의 군사적 접촉선을 기준으로 정해졌다.
⑤ (나)는 1945년 광복 직후 미국과 소련의 점령 구역을 나눈 선이다.

---

08 **정전·휴전과 종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ㄱ. 정전은 전투를 멈추기로 한 것이며 종전과 구별된다.
ㄴ. 1953년 정전 협정은 남북의 별도 정부를 수립한 합의이다.
ㄷ. 종전은 정전과 달리 전쟁을 끝내는 데 초점이 있다.
ㄹ. 군사 분계선의 설정은 종전과 평화 체제의 완성을 뜻한다.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ㄷ ④ ㄱ, ㄹ ⑤ ㄴ, ㄷ

---

09 **북한을 이해하는 태도로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ㄱ. 군사적 위협에 대비하면서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을 모색한다.
ㄴ. 한 지역의 최근 생활 영상이면 다른 지역의 생활을 판단할 근거도 충분하다.
ㄷ. 인권을 제한하게 된 배경이 설명되면 그 제한은 도덕적으로 정당화된다.
ㄹ. 당국의 정책을 비판하더라도 주민 개인의 존엄성은 존중한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ㄷ, ㄹ ④ ㄴ, ㄷ ⑤ ㄱ, ㄴ

2부 북한 체제와 주민 생활

북한 체제 한눈에

영역	핵심 용어	한 줄 뜻	볼 곳
정치	일당 독재·수령 중심 체제·주체사상·선군 정치	권력이 당과 수령에게 집중되고, 통치 이념과 군 우선의 통치 방식이 이를 뒷받침해 왔다.	Q09~Q10
경제	중앙 집권적 계획 경제·배급·장마당	국가 계획이 기본이지만 주민의 시장 거래도 생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Q11~Q13
사회·문화	집단주의·사회주의 대가정·선전 수단인 예술·언론	집단의 이익과 수령·당에 대한 충성을 강조하고 문화 활동을 통제한다.	Q14~Q15
인권	생명권·자유권·생존권·평등권 **교과서의 묶음** 생명권 침해·정치적 권리 침해·생존권 위협	생명, 자유, 기본 생활, 차별의 문제를 구별해 살핀다.	Q16~Q18
주민 생활	의식주·12년제 의무 교육·조직 생활·생활 총화	생활 제도와 실제 여건, 조직을 통한 관리를 함께 본다.	Q19~Q21

2-A 정치 Q09~Q10

Q09 북한의 '일당 독재'와 '수령 중심 체제'는 무엇이 다른가요?

일당 독재는 한 정당에 권력이 집중된다는 점을, 수령 중심 체제는 그 정당을 이끄는 최고 지도자에게 권력이 집중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 **일당 독재:** 여러 정치 세력이 자유롭게 경쟁하여 권력을 교체하기 어렵다.
- **수령 중심 체제:** 최고 지도자를 중심으로 당과 국가가 움직이고 충성을 요구한다.

북한에서는 조선 노동당이 국가와 사회를 이끌고, 그 당을 이끄는 최고 지도자의 권한이 매우 크다. 국가 기관이 여러 개 있다는 사실만으로 서로 권력을 견제(권력이 함부로 쓰이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감시)하는 민주적 권력 분립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는 없다.

쉽게 말하면 기관의 이름이 몇 개인가보다 **실제로 누가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그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가**를 보아야 한다.

Q10 주체사상과 선군 정치는 어떻게 다른가요?

주체사상은 통치 이념이고, 선군 정치는 군대를 앞세우는 통치 방식이다. 초점이 다르다.

용어	핵심 뜻	혼동하지 말 것
주체사상	북한이 정치·경제·군사 등에서 주체성을 강조하며 통치의 근거로 삼아 온 사상	주민 각자가 자유롭게 국가 정책을 결정한다는 뜻이 아님
선군 정치	군대를 중시하고 앞세워 체제를 유지하려는 통치 방식	군대가 강하다는 뜻만이 아니라, 정치·경제보다 군을 앞세운다는 뜻

주체사상은 실제로 수령 중심 체제를 정당화하는 데 이용되어 왔다. 선군 정치는 특히 1990년대 이후 북한 체제를 설명할 때 중요한 용어이다.

도구 ① '주체'를 강조함 ≠ 주민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 보장
내세우는 말과 실제 권력 구조를 함께 살펴야 한다.

2-B 경제 Q11~Q13

Q11 중앙 집권적 계획 경제는 국가가 모든 물건을 직접 판다는 뜻인가요?

핵심은 중요한 경제 결정을 중앙에서 세운 계획에 따라 내린다는 것이다. 모든 거래가 한 가지 방식으로만 이루어진다는 뜻은 아니다.

- **중앙 집권적:** 중요한 결정 권한이 중앙 당국에 모여 있다.
- **계획 경제:** 무엇을 얼마나 생산하고 자원을 어디에 배분할지 계획으로 정한다.

북한은 토지·공장 같은 주요 **생산 수단(물건을 생산하는 데 쓰이는 자원과 시설)**의 국가·협동단체(사람들이 생산 수단을 함께 소유하고 공동으로 일하는 단체) 소유를 기본으로 한다. 이를 개인이 옷이나 생활용품도 전혀 가질 수 없다는 뜻으로 읽으면 안 된다.

실제 경제에서는 국가 계획과 주민의 시장 거래가 함께 나타난다. 따라서 **제도상의 원칙과 주민이 물건을 구하는 실제 방법**을 구별해야 한다.

도구 ① **제도상의 원칙 ≠ 실제 거래 방식의 전부**
국가 계획을 기본으로 하면서 주민의 시장 거래가 함께 나타날 수 있다.

Q12 '고난의 행군'과 '장마당'은 어떤 관계가 있나요?

1990년대 중후반의 심각한 경제난과 식량난으로 배급이 약해지자, 주민들은 시장 거래를 통해 필요한 물품을 구하는 데 더 의존하게 되었다.

경제난 뒤 시장의 역할은 어떻게 커졌을까?

제도상의 원칙: 중앙의 계획 · 국가 배급

경제난의 배경
사회주의권 붕괴로 지원·교역 감소
경제 구조의 문제
자연재해

↓

1990년대 중후반	배급 약화	시장 역할 확대	함께 존재
경제난·식량난 고난의 행군	주민에게 필요한 물품 공급이 부족해짐	장마당에서 필요한 물품을 사고팔며 마련	계획과 시장 국가 통제 지속

시장 거래는 이전에도 있었으며, 경제난 뒤 그 역할이 커졌다.
시장 역할의 확대 ≠ 계획과 국가 통제의 소멸

북한 당국은 이 어려움을 견뎌 내도록 독려하는 구호로 **고난의 행군**을 내세웠다. 여기서 '행군'은 어려움을 참고 견디자는 뜻으로 붙인 말이다.

배급은 국가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식량이나 생활 물자를 나누어 주는 것이다. **장마당**은 북한의 시장을 가리키는 말이다. 장마당에서는 주민들이 물건을 팔아 돈을 마련하거나 돈으로 필요한 물건을 산다.

소련의 해체와 동유럽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로 기존의 지원과 교역이 크게 줄었고, 경제 구조의 문제와 자연재해도 겹쳤다. 이처럼 경제난에는 여러 원인이 함께 작용했다. 시장 거래는 경제난 전에도 있었으며, 이 시기에 주민 생활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커졌다.



장면: 상인과 구매자가 돈과 생활 물품을 주고받는다. 특정 시기·지역의 실제 시장을 재현한 그림은 아니다.

Q13 장마당이 생겼으니 북한은 완전한 시장 경제인가요?

아니다. 장마당의 확대는 시장의 역할이 커졌다는 뜻이지만, 계획 경제와 국가 통제가 모두 사라졌다는 뜻은 아니다.

자료에서 확인한 내용	할 수 있는 판단	지나친 판단
주민들이 물건을 사고팔며 생활에 필요한 것을 마련함	시장 거래가 주민 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함	모든 주민이 배급 없이 시장만 이용함
국가 계획 아래에서도 장마당이 운영됨	계획과 시장의 요소가 함께 나타남	북한의 경제 체제가 완전히 바뀜

도구 ① 시장의 역할 확대 ≠ 계획과 국가 통제의 소멸

제도의 원칙과 생활 속 변화를 함께 살펴야 한다.

2-C 사회·문화 Q14~Q15

Q14 집단주의와 '사회주의 대가정'은 무엇인가요?

집단주의는 개인보다 집단의 이익을 앞세우는 원칙이고, 사회주의 대가정은 사회 전체를 수령 중심의 큰 가족처럼 설명하는 통치 논리이다.

가족에 빗댄 역할	사회주의 대가정에서 가리키는 대상
아버지	수령
어머니	당
자녀	주민

이 비유가 주민에게 요구하는 것은 **수령과 당에 대한 충성과 복종**이다. 북한의 집단주의에서는 국가와 조직을 위한 헌신(자신의 힘과 노력을 바침)이 강조된다.

가정도 단순한 개인 생활의 공간만이 아니라, 체제에 충실한 구성원을 길러 내는 역할을 요구받는다. 그렇다고 주민들이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까지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도구 ① 집단을 강조함 ≠ 개인의 권리가 자동으로 보장됨
집단의 이익이라는 이름으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제한되는지도 살펴야 한다.

Q15 북한에는 예술이나 언론이 없나요?

있다. 다만 예술과 언론이 당의 이념과 정책을 알리고 체제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강하게 통제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공연, 영화, 노래, 신문 등이 있다는 사실과, 창작·보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된다는 사실은 같지 않다. 무엇을 만들거나 보도할 수 있는지, 정부를 자유롭게 비판할 수 있는지를 함께 보아야 한다.

선전은 특정 생각이나 정책을 널리 알리고 받아들이도록 하려는 활동이다. 북한의 예술·언론을 이해할 때에는 단순히 "문화가 있다/없다"를 묻기보다 **어떤 목적과 통제 아래 운영되는가**를 묻는다.

도구 ① 예술·언론의 존재 ≠ 창작·보도의 자유 보장
어떤 목적과 통제 아래 운영되는지 함께 확인한다.

2-D 인권 Q16~Q18

Q16 북한의 인권 문제는 모두 같은 종류인가요?

어떤 권리가 침해되는지에 따라 구별할 수 있다. 한 사건에서 여러 권리가 함께 침해될 수도 있다.

주로 살필 권리	뜻	대표적으로 살펴볼 상황
생명권	생명을 부당하게 빼앗기지 않을 권리	공개 처형 등 생명을 빼앗는 문제, 자의적(정해진 법과 절차를 따르지 않고 마음대로 하는) 처형
자유권	국가의 부당한 간섭 없이 자유롭게 살 권리	신체의 자유: 부당한 체포·구금·고문, 정치범 수용소의 부당한 구금 종교·표현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제한
생존권 (사회권)	인간다운 생활에 필요한 기본 조건을 보장받을 권리	충분한 식량이나 필요한 의료에 접근하기 어려움
평등권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가족의 배경을 이유로 교육·직업 기회에서 차별함

교과서에서는 같은 인권 문제를 아래 세 묶음으로 정리한다. 위 표는 각 사례에서 침해되는 권리를 더 나누어 살핀 것이다.

교과서의 묶음	그 안에 드는 사례	권리로 구별하면
생명권 침해	공개적인 처형이 이루어지고, 북한을 떠난 사람이 불법으로 처형되기도 함. 법에 어긋나는 구금·체포와 고문이 발생하며 공정한 재판 절차가 보장되지 않음.	생명권 + 자유권 중 신체의 자유. 정당한 절차·공정한 재판의 보장도 관련됨.
정치적 권리 침해	거주·이전, 종교, 여행 등 개인의 자유와 정치적 권리가 폭넓게 제한됨. 출신 성분·당성에 따른 차별로 평등하게 대우받지 못함.	자유권 + 참정권 + 평등권
생존권 위협	경제난으로 배급이 끊겨 먹을 것을 구하기 어려워지고, 아파도 필요한 치료를 받기 어려움.	생존권(사회권)

여기서 **‘정치적 권리 침해’는 자유권과 평등권 문제도 함께 묶은 이름**이다. 참정권 침해만을 가리키는 말로 좁혀 읽지 않는다.

정치 참여와 관련해서는 **자유로운 선거로 지도자를 고를 수 없는 문제를 참정권의 관점**에서 살핀다. 종교의 자유와 정치 참여의 권리는 구별한다.

구금은 사람을 일정한 장소에 가두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법적 근거와 정당한 절차 없이 가두거나 처벌하는 것은 인권 문제이다. 정치범 수용소에서 이루어지는 부당한 구금·강제 노동·가혹 행위도 여러 권리의 침해와 연결된다.

생명권과 생존권은 말이 비슷하지만, 사례의 초점이 다르다. **직접 생명을 빼앗는가, 먹고 치료받을 기본 조건이 무너졌는가**를 구별하면 쉽다.

Q17 헌법에 종교의 자유가 적혀 있다면 실제로도 자유로운 것 아닌가요?

> **아니다. 규정에 권리가 적혀 있다는 사실과 생활 속에서 그 권리를 실제로 누린다는 사실은 다르다.**

확인할 것	묻는 질문
제도·규정	권리를 보장한다고 적혀 있는가?
실제 생활	그 권리를 행사해도 부당한 처벌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는가?

북한은 헌법에 신앙의 자유를 규정해 왔지만, 실제 종교 활동은 강하게 제한되고 처벌의 위험에 놓이기도 한다. 따라서 헌법 문구만으로 종교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보장된다고 판단할 수 없다.

도구 ① **규정상 보장 ≠ 실질적 보장**
권리의 이름이 있는지만 보지 말고, 사람들이 실제로 누리는지도 확인한다.

Q18 북한의 '출신 성분'과 '당성'은 능력을 말하나요?

> **아니다. 출신 성분은 가족과 사회적 배경 등을, 당성은 당과 체제에 대한 충성의 정도를 가리킨다.**

출신 성분 + **당성** → **교육·직업·거주 기회에 영향**

이런 기준이 교육·직업·거주 등의 기회에 영향을 주면, 개인의 실제 능력이나 노력과 관계없이 차별을 받을 수 있다. 부모나 조상의 배경은 자녀가 선택한 일이 아니다.

북한의 계층 구조는 흔히 **핵심·동요·적대 계층**으로 설명한다. 일부 자료는 최고 지도자 가문 등을 뜻하는 **백두 계층**을 별도로 구분하기도 한다. 자료마다 구분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름만으로 모든 주민의 현재 처지를 단정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구분의 숫자보다, 출신 배경과 충성도가 기회를 좌우하는 차별 구조이다.

2-E 주민 생활 Q19~Q21

Q19 북한 주민은 먹고 입고 사는 모습이 모두 똑같나요?

아니다. 지역, 직업, 소득, 배급 접근 정도 등에 따라 생활에 차이가 있다.

영역	제도나 기본 원칙	실제 생활에서 함께 볼 점
옷	국가 공급 체계가 마련되어 있었음	시장에서 구입하는 등 개인적으로 마련하기도 함
음식	배급을 통한 식량 공급	배급 부족을 겪으면 시장이나 텃밭 등에 의존하기도 함
집	국가가 주택을 배정하는 제도가 기본	지역과 지위에 따라 주거 여건에 차이가 있음

국가가 집을 배정한다는 말은 **모든 사람이 똑같이 좋은 집을 받는다**는 뜻이 아니다. 시장이 있다는 말도 **누구나 필요한 만큼 살 돈이 있다**는 뜻은 아니다.

도구 ①·② **제도의 원칙 ≠ 실제 생활 / 일부 ≠ 전체**
생활 여건을 살피고, 한 지역이나 한 사람의 모습으로 모두를 단정하지 않는다.

Q20 무상 의무 교육이라면 누구나 어려움 없이 공부하나요?

교육을 받을 제도가 있다는 것과 실제 학습 조건이 충분하다는 것은 다르다.

유치원 높은반 1년 + **소학교 5년** + **초급 중학교 3년** + **고급 중학교 3년** = **12년**

무상 교육	의무 교육
교육비를 국가가 부담한다는 원칙	정해진 교육을 반드시 받도록 하는 제도

유치원 높은반은 학교에 들어가기 전의 마지막 1년 과정이다. 북한은 이 과정을 포함한 **12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학용품이나 학교 운영 등에 필요한 부담, 경제난에 따른 학습 여건의 차이가 생길 수 있다.

교육에는 지식·기술을 가르치는 내용과 함께 지도자와 체제에 대한 충성을 강조하는 사상 교육도 포함된다. 학생들이 농사나 건설 등 노동에 동원되어 학습에 영향을 받는 문제도 살펴야 한다.

도구 ① **무상 교육 제도 ≠ 실제 부담과 학습 격차가 전혀 없음**
제도의 이름만으로 모든 학생의 생활을 판단하지 않는다.

Q21 북한의 조직 생활과 생활 총화는 동아리 활동 같은 것인가요?

> **자유롭게 선택하는 취미 모임과는 다르다. 조직을 통해 주민의 행동과 사상을 관리하는 성격이 강하다.**

주민들은 연령과 직업 등에 따라 소년단, 청년 조직, 직장·사회 조직 등에 속해 생활한다. 정치 학습과 **생활 총화** 등에 참여하며, 조직 생활은 어린 시절부터 성인·노년기까지 이어질 수 있다.

생활 총화는 일정 기간 자신의 생활과 행동을 조직의 기준에 비추어 돌아보고, 자신과 다른 사람의 행동을 비판·평가하는 모임이다. 개인의 자율적인 일기 쓰기나 단순한 친목 모임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

쉽게 말하면 "여럿이 모인다"는 모습보다 **참여가 자율적인지, 무엇을 배우고 평가하는지**가 중요하다.



장면: 사람들이 조직 모임에 앉아 있고, 한 사람이 공책을 보며 자신의 생활을 이야기한다. 생활 총화의 한 장면을 이해하기 위한 창작 그림이다.

2-F 주민을 보는 태도 Q22

Q22 북한 주민을 동포로 본다는 것은 체제도 무조건 지지한다는 뜻인가요?

아니다. 역사와 문화를 함께해 온 이웃으로 존중하는 것과 북한의 제도·정책에 동의하는 것은 별개이다.

주민들은 가족을 아끼고 배우고 일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체제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엄성까지 낮게 보아서는 안 된다.

반대로 같은 민족이라는 이유로 인권 침해를 비판하지 않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사람은 존중하고, 제도와 행동은 근거와 보편적 가치로 판단한다.**

어떤 사람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그 사람이 인간이기 때문이다. 동포라는 관계는 관심과 연대(서로의 어려움에 관심을 갖고 함께 힘을 모음)의 이유가 될 수 있지만, 인권의 조건은 아니다.

도구 ④ 당국·체제 ≠ 주민 한 사람 한 사람
사람의 존엄성은 존중하고, 정책과 제도는 보편적 가치로 판단한다.

확인 문제 2부 북한 체제와 주민 생활 10~24

10 다음 설명이 강조하는 개념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가) 국가와 사회의 실질적인 권한이 조선 노동당에 집중된다.
(나) 그 당을 이끄는 최고 지도자를 중심으로 당과 국가가 움직인다.

① (가) 선군 정치 / (나) 주체사상
② (가) 수령 중심 체제 / (나) 일당 독재
③ (가) 일당 독재 / (나) 선군 정치
④ (가) 일당 독재 / (나) 수령 중심 체제
⑤ (가) 주체사상 / (나) 집단주의

11 (가), (나)에 해당하는 용어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가) 정치·경제·군사 등에서 주체성을 강조하며 통치의 근거로 삼아 온 사상
(나) 군대를 앞세워 체제를 유지하려는 통치 방식

① (가) 생활 총화 / (나) 주체사상
② (가) 선군 정치 / (나) 주체사상
③ (가) 주체사상 / (나) 고난의 행군
④ (가) 주체사상 / (나) 선군 정치
⑤ (가) 집단주의 / (나) 장마당

12 **다음 설명에 가장 직접적으로 해당하는 북한 경제의 원칙은?**

> 중앙 당국이 주요 생산 목표와 자원 배분 계획을 세우고, 각 경제 단위가 그 계획에 따라 활동하도록 한다.

① 생산 수단의 공동 소유
② 중앙 집권적 계획 경제
③ 장마당의 시장 거래
④ 배급 제도
⑤ 국가의 주택 배정

---

13 **다음 설명을 잘못 이해한 것은?**

> 북한은 주요 생산 수단의 국가·협동단체 소유를 기본으로 한다.

① 생산에 쓰이는 자원과 시설에 관한 설명이다.
② 토지와 공장 같은 생산 기반의 소유 원칙을 말한다.
③ 개인 생활용품의 소유 문제와 구별해서 읽어야 한다.
④ 경제의 제도적 특징을 설명한 말이다.
⑤ 주민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옷도 전혀 가질 수 없다.

---

14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은?**

> 북한 당국은 1990년대 중후반의 심각한 식량난과 경제난을 견뎌 내도록 독려하는 구호로 (　　)을/를 내세웠다.

① 중앙 집권적 계획 경제
② 사회주의 대가정
③ 생활 총화
④ 고난의 행군
⑤ 선군 정치

---

15 **다음 자료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변화는?**

> 배급이 약해진 뒤 주민들은 장마당에서 곡식과 생활용품을 사거나, 물건을 팔아 필요한 돈을 마련하는 데 더 의존하게 되었다.

① 주민의 물품 구입에 필요한 돈을 국가가 배급하는 방식이 확대되었다.
② 주민에게 필요한 물품을 공급하는 국가 배급의 역할이 커졌다.
③ 공장과 토지의 소유 주체가 국가·협동단체에서 개인으로 바뀌었다.
④ 장마당의 거래량을 중앙 당국이 미리 계획해 배정하는 방식이 확대되었다.
⑤ 주민이 필요한 물품을 구할 때 시장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다.

---

16 **사회주의 대가정에서 가족의 역할에 빗댄 대상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순서는 아버지 / 어머니 / 자녀이다.**

① 수령 / 주민 / 당
② 수령 / 당 / 주민
③ 당 / 수령 / 주민
④ 당 / 주민 / 수령
⑤ 주민 / 당 / 수령

---

17 **다음 자료가 직접 보여 주는 북한 사회의 특징은?**

> 공연의 내용과 신문 보도는 당의 이념·정책을 알리고 주민이 이를 받아들이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

① 수령·당·주민의 관계를 가족의 역할에 빗대어 설명한다.
② 예술·언론이 체제 선전의 수단으로 활용된다.
③ 생활 총화를 통해 주민이 서로의 행동을 평가한다.
④ 군대를 정치·경제보다 앞세우는 통치 방식이 강조된다.
⑤ 중앙에서 생산 목표와 자원 배분의 계획을 세운다.

---

18 **다음 사례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침해된 권리에 해당하는 것은?**

> 한 주민이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평화적으로 말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받았다. (사례는 권리 판단을 위한 가상 상황이다.)

① 자유권 중 표현의 자유
② 자유권 중 종교의 자유
③ 평등권
④ 생존권(사회권)
⑤ 자유권 중 거주·이전의 자유

---

19 **다음 두 사례에서 특히 위협받는 권리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 (가) 사람을 자의적으로 처형하여 생명을 빼앗는다.
> (나) 식량과 필수 의약품에 접근하기 어려워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지 못한다.

① (가) 생명권 / (나) 표현의 자유
② (가) 생존권(사회권) / (나) 생명권
③ (가) 생명권 / (나) 생존권(사회권)
④ (가) 평등권 / (나) 생존권(사회권)
⑤ (가) 거주·이전의 자유 / (나) 평등권

---

20 **교과서에서 '정치적 권리 침해'로 묶는 문제 중 종교 활동의 제한에 관한 자료이다. 두 자료를 함께 읽을 때 적용할 판단 도구와 직접 관련된 권리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 자료 A: 헌법에 신앙의 자유가 규정되어 있다.
> 자료 B: 실제로는 종교 활동이 심하게 제한된다.

① 도구 ④ 당국·체제 ≠ 주민 한 사람 한 사람 / 참정권
② 도구 ② 일부 ≠ 전체 / 생존권
③ 도구 ③ 원인을 이해함 ≠ 옳다고 인정함 / 평등권
④ 도구 ① 적힌 것·내세운 말 ≠ 실제 생활 / 참정권
⑤ 도구 ① 적힌 것·내세운 말 ≠ 실제 생활 / 자유권

---

21 **출신 성분과 당성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가) 가족과 조상의 사회적 배경 등을 평가한다.
(나) 당과 체제에 얼마나 충성하는지를 평가한다.

① (가) 출신 성분 / (나) 생활 총화
② (가) 출신 성분 / (나) 당성
③ (가) 당성 / (나) 출신 성분
④ (가) 사회주의 대가정 / (나) 출신 성분
⑤ (가) 집단주의 / (나) 당성

---

22 **북한 주민의 생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ㄱ. 국가의 주택 배정과 지역·지위에 따른 주거 여건 차이는 함께 나타날 수 있다.
ㄴ. 배급이 부족하여 장마당에서 곡식을 사는 것은 국가 배급을 이용하는 사례이다.
ㄷ. 시장에서 옷을 사 입는 것은 국가 공급이 아니라 개인이 직접 마련한 사례이다.
ㄹ. 집단주의 사회라는 설명은 주민들이 가족 사이의 정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뜻이다.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ㄱ, ㄷ

---

23 **북한의 교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ㄱ. 12년제 의무 교육을 실시한다.
ㄴ. 무상이라는 제도가 있으므로 실제 학습 부담과 격차는 전혀 없다.
ㄷ. 체제에 대한 충성을 강조하는 사상 교육이 포함된다.
ㄹ. 노동 동원은 학습에 영향을 줄 수 있다.

① ㄱ, ㄷ, ㄹ ② ㄱ,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ㄴ, ㄷ, ㄹ

---

24 **다음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소속 조직에서 일정 기간의 생활과 행동을 돌아보고, 자신과 다른 사람의 행동을 조직의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① 생활 총화이며 조직을 통한 주민 관리의 성격이 있다.

② 주체사상이며 군대를 정치·경제보다 우선하는 통치 방식이다.

③ 사회주의 대가정이며 국가가 가정에 식량을 배급하는 활동이다.

④ 생활 총화이며 개인이 자유롭게 골라 참여하는 취미 모임이다.

⑤ 집단주의이며 생산 수단을 공동 소유하는 방식을 뜻한다.

3부 북한 이탈 주민과 함께 살아가기

3-A 누구이며 무엇이 어려운가 Q23~Q24

Q23 북한을 떠난 사람은 모두 법에서 말하는 북한 이탈 주민인가요?

북한에 생활 기반이 있었고, 북한을 벗어난 뒤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았다는 조건을 함께 살핀다.

북한 이탈 주민 =

① 북한에 생활 기반(주소·직계가족·배우자·직장 등)이 있었음

+

② 북한을 벗어남

+

③ 그 뒤 외국 국적을 얻지 않음

직계가족은 부모·자녀처럼 세대가 직접 이어지는 가족이다.

생활고를 벗어나기 위해, 더 자유롭게 살기 위해, 가족과 만나거나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떠나는 등 이유는 다양하다. 모든 사람이 같은 이유와 경로로 이동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이탈 과정에서는 긴 이동과 체류(일정한 곳에 머무름), 신변의 위험, 가족과의 이별, 학업 중단 등을 겪을 수 있다. 북한을 떠나는 일과 새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일은 서로 다른 과정이다.

Q24 남한에 오면 정착의 어려움은 모두 해결되지 않나요?

안전한 생활을 시작해도 취업, 가족에 대한 그리움, 낯선 말과 제도 등 여러 어려움이 남을 수 있다.

어려움	사례에서 찾을 단서	필요한 지원의 예
경제적 어려움	경력·자격을 인정받기 어려움, 구직과 소득의 불안정	직업 훈련, 자격·경력 확인과 보완, 취업 정보
심리적 어려움	가족에 대한 그리움, 이별의 죄책감, 불안과 외로움	마음을 나눌 관계, 상담, 차별 예방
문화적 어려움	익숙하지 않은 말·생활 방식·제도를 이해하기 어려움	생활 안내, 말뜻 설명, 사회 적응 교육

한 사람이 여러 어려움을 동시에 겪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직장 용어를 이해하기 어려운 문화적 문제가 취업이라는 경제적 문제와 이어질 수 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어려움 ≠ 능력이나 성실성이 부족함
익숙하지 않은 제도와 주변의 편견 등 환경도 함께 살펴야 한다.

3-B 어떻게 함께 살까 Q25~Q28

Q25 말투가 낯설거나 세게 들리면 불친절한 사람이라고 봐도 되나요?

말투만으로 성격이나 의도를 단정하지 말고, 표현의 뜻과 대화 상황을 확인해야 한다.

오해를 키우는 반응	뜻을 확인하는 반응
“그런 것도 몰라?”	“이 말은 여기서 이런 뜻으로 썼어.”
말투만 듣고 화났다고 단정함	“지금 어떤 뜻으로 말한 건지 다시 알려 줄래?”
모르는 표현을 들었지만 아는 척함	“그 표현은 무슨 뜻이야?”
상대만 일방적으로 고치라고 함	서로 속도를 조절하고 쉬운 말로 다시 설명함

같은 한국어라도 생활 환경에 따라 단어의 뜻이나 말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다. 외래어나 학교·직장에서 쓰는 표현이 낯설 수도 있다. 그렇다고 어느 지역 출신은 모두 같은 말투나 성격을 가졌다고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



장면: 두 학생이 같은 눈높이에서 설명을 듣고 다시 묻는다.

도구 ② **한 사람의 말투 ≠ 같은 출신 모두의 성격**

낯선 표현은 뜻을 확인하고, 출신만으로 의도를 단정하지 않는다.

Q26 북한 이탈 학생이 수업을 어려워하면 기초 능력이 낮아서인가요?

> **그렇게 단정할 수 없다. 이동 중 학업이 끊겼거나 교육 과정과 용어가 달라 생긴 학습 공백일 수 있다.**

어떤 학생은 이미 잘 아는 내용이 있고, 다른 내용은 배울 기회가 없었을 수 있다. 따라서 출신만 보고 수준을 정하기보다 무엇을 알고 어디에서 어려워하는지 확인해 필요한 부분을 보충해야 한다.



장면: 학생이 자신 있게 설명하는 내용은 인정하고, 교사와 친구가 다음 학습을 함께 돕는다.

학생이 겪는 어려움에는 친구 관계, 편견, 진로 고민과 **정체성(나는 누구이며 어디에 속해 있는가에 대한 생각)**의 혼란도 있다. 학습 지원과 정서적 지지가 함께 필요하다.

단순히 답을 대신 써 주는 도움보다, 스스로 이해하고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기다려 주는 도움이 적절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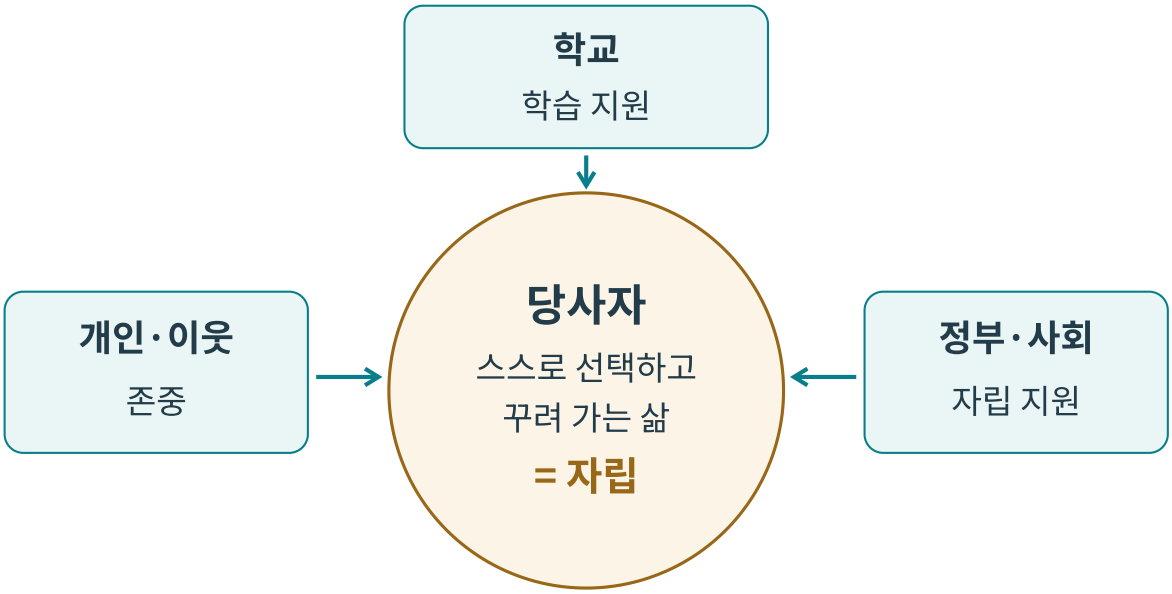
도구 ② **일부 학습의 어려움 ≠ 그 학생의 전체 능력**

이미 아는 것과 보충할 것을 구체적으로 확인한다.

Q27 정착 지원은 정부가 돈을 주면 끝나는 일인가요?

아니다. 생활 안정과 자립을 위한 제도, 학교의 지원, 이웃의 존중이 함께 필요하다.

지원은 당사자가 삶을 꾸려 가도록 돕는다



당사자의 의사와 선택을 존중하는 지원

주체	할 수 있는 일	지향하는 결과
개인·이웃	편견을 버리고 공감하기, 차별에 동조(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행동에 함께 따름)하지 않기, 필요한 정보 함께 찾기	존중받는 관계와 소속감
학교	학습 공백 보충, 상담, 친구 관계와 진로 지원	학습과 학교생활의 지속
정부·사회	직업 훈련, 사회 적응 교육, 취업 연계, 안정적인 지원 체계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

이 지원은 한 주체의 몫으로 딱 나뉘지 않는다. 상담이나 차별 예방처럼 여러 주체가 함께 할 일도 있다.



장면: 성인이 필요한 기술을 배우고 자신의 진로 선택에 대해 상담한다.

자립은 아무 도움도 받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필요한 지원을 바탕으로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꾸려 갈 힘을 갖추는 것이다. 당사자의 의사와 개인정보를 존중하며 필요한 도움을 묻는 태도가 중요하다.

Q28 북한 이탈 주민을 돕는 일이 왜 통일 준비와 연결되나요?

>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편견을 줄이고 함께 살아갈 방법을 마련하는 사회 통합의 경험이 되기 때문이다.**

통일을 준비한다는 것은 땅과 제도를 합치는 문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서로를 낮게 보지 않고, 차이를 이해하며, 생활 속의 갈등을 공정하게 해결하는 과정도 필요하다.

이를 **마음의 통일**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모든 사람이 같은 말투와 취향을 갖게 만든다는 뜻이 아니다. 차이가 있어도 동등한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신뢰를 쌓는다는 뜻이다.

사회 통합 ≠ 차이를 모두 없앰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며 함께 살아갈 관계와 제도를 만든다.

북한 이탈 주민은 통일을 위해 이용할 수단이 아니라, 지금 우리 사회에서 존중받아야 할 이웃이다. 현재의 인권과 생활을 보장하는 일이 우선이며, 그 과정이 통일 이후의 사회 통합을 준비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확인 문제 3부 북한 이탈 주민과 함께 살아가기 25~28

25 **법에서 말하는 북한 이탈 주민의 의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북한을 떠났다는 사실만 있으면 이후 외국 국적 취득 여부는 상관없다.

② 북한에 주소·직계가족·배우자·직장 등 생활 기반이 있었고, 북한을 벗어난 뒤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았다는 조건이 있다.

③ 부모가 북한 출신이면, 다른 나라에서 태어난 자녀도 조건과 관계없이 해당한다.

④ 남한에 입국하면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은 자동으로 사라진다.

⑤ 정착을 시작한 사람은 모두 같은 이유로 북한을 떠났다.

---

26 **다음 사례에서 직접 강조된 어려움을 순서대로 바르게 연결한 것은?**

(가) 이전 직장에서 쌓은 경력을 인정받기 어려워 취업이 막막하다.
(나) 북에 남은 가족이 떠올라 불안하고 외롭다.
(다) 일상에서 쓰는 낯선 표현과 생활 제도를 이해하기 어렵다.

① 경제적 / 심리적 / 문화적

② 문화적 / 심리적 / 경제적

③ 심리적 / 문화적 / 경제적

④ 경제적 / 문화적 / 심리적

⑤ 문화적 / 경제적 / 심리적

---

27 **다음 두 판단에 공통으로 적용해야 할 도구와 그 취지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가) 전학생 한 명의 낯선 말투를 듣고 같은 출신 학생들의 성격을 짐작했다.
(나) 전학생이 수학 용어 몇 개를 모른다는 이유로 다른 과목의 능력도 낮을 것으로 보았다.

① 도구 ④ — 당국의 정책과 주민 개인의 생각을 구별한다.

② 도구 ③ — 상황의 원인을 알게 된 것과 옳다고 인정하는 것을 구별한다.

③ 도구 ② — 한 사람이나 일부 모습으로 전체를 판단하지 않는다.

④ 도구 ①·④ — 규정의 문구와 당국의 정책을 주민의 생활과 비교한다.

⑤ 도구 ① — 제도에 적힌 내용이 실제 생활에서 보장되는지 비교한다.

---

28 **다음 두 지원 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계획 A: 당사자가 관심 있는 직업을 고르고 필요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
계획 B: 학교 구성원들이 서로 다른 말투와 경험을 존중하고, 갈등을 공정하게 해결할 약속을 만든다.

ㄱ. A는 필요한 지원을 바탕으로 삶을 꾸려 갈 힘을 기르는 자립과 연결된다.
ㄴ. A는 도움을 제공하므로 자립의 의미와 어긋난다.
ㄷ. B는 차이를 존중하며 동등한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사회 통합과 연결된다.
ㄹ. B의 목표는 구성원의 말투와 생활 방식을 같게 만드는 것이다.

① ㄴ, ㄷ ② ㄱ, ㄴ ③ ㄷ, ㄹ ④ ㄱ, ㄷ ⑤ ㄱ, ㄹ

확인 문제 종합 확인 29~36

29 **설명에 해당하는 용어를 쓰시오.**

(가) 지리적 위치가 국제 정치와 안보에 영향을 주는 관점에서 본 한반도의 위치:
( ) 위치

(나) 국제기구의 감독 아래 특정 국가가 일정 기간 한 지역의 통치를 맡는 방식:
( )

---

30 **보기에서 골라 빈칸에 쓰시오. 같은 말을 여러 번 쓰지 않는다.**

보기: 생산 수단 / 개인 생활용품 / 자립 / 소속감

(가) 공장·기계처럼 물건을 생산하는 데 쓰이는 자원과 시설을 ( )이라고 한다.

(나) 필요한 지원을 바탕으로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꾸려 갈 힘을 갖추는 것은 ( )이다.

---

31 **사례에서 직접 강조한 어려움을 '경제적·심리적·문화적' 중에서 골라 쓰시오.**

(가) 새로 사용하는 은행·교통 제도의 뜻과 이용 방법이 낯설다. ( )

(나) 가족과 헤어진 일을 떠올리면 죄책감으로 괴롭다. ( )

(다) 구직 기간이 길어져 생활에 필요한 소득을 마련하기 어렵다. ( )

---

32 **사례에서 직접 강조한 권리를 '생명권·생존권(사회권)·평등권' 중에서 골라 쓰시오.**

(가) 조부모의 배경만으로 두 학생에게 서로 다른 진학 기회를 준다. ( )

(나) 정당한 근거와 절차 없이 사람을 처형하여 목숨을 빼앗는다. ( )

(다) 필요한 식량과 치료를 얻기 어려워 기본 생활을 유지하지 못한다. ( )

---

33 **옳으면 O, 틀리면 X를 쓰고, 틀린 문장은 굵은 부분을 바르게 고치시오.**

(가) 1953년 정전 협정은 **전투를 멈춘 합의**이다. ( )

(나) 심리적 분단은 **38선의 위도만을 뜻한다**. ( )

(다) 지리적 분단과 정치적 분단은 **구별할 수 있다**. ( )

고친 문장:

---

34 **옳으면 O, 틀리면 X를 쓰고, 틀린 문장은 굵은 부분을 바르게 고치시오.**

(가) 어떤 제도를 설명할 수 있어도 그 제도가 도덕적으로 옳은지는 **따로 판단해야 한다**. ( )

(나) 북한 주민의 생각은 당국의 정책과 **모두 같다고 보아야 한다**. ( )

(다) 다른 생활 방식에 적응하도록 돕는 일은 **그 사람의 선택을 존중하면서 할 수 있다**. ( )

고친 문장:

---

35 **다음 주장이 성급한 이유를 ‘시장 거래’와 ‘국가 통제’를 모두 포함하여 한 문장으로 쓰시오.**

> “장마당에서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파는 모습을 보았으니, 북한은 이미 완전한 시장 경제로 바뀐 것이야.”

답:

---

36 **다음 교사의 판단이 적절한 이유를 ‘학습 공백’과 ‘출신’을 모두 포함하여 한 문장으로 쓰시오.**

> 북한에서 온 전학생은 도형 설명을 잘하지만 일부 수학 용어는 낯설어했다. 교사는 학생이 이미 아는 내용을 확인하고, 이동 중 배우지 못한 부분과 낯선 용어를 보충하기로 했다.

답:

정답과 해설

객관식 정답표

01	⑤	02	④	03	③	04	④	05	③	06	①	07	①
08	③	09	②	10	④	11	④	12	②	13	⑤	14	④
15	⑤	16	②	17	②	18	①	19	③	20	⑤	21	②
22	⑤	23	①	24	①	25	②	26	①	27	③	28	④

문항별 해설

01 **정답 ⑤.** 1945년 분할 점령, 1948년 별도 정부 수립, 1950년 전쟁 발발, 1953년 정전 협정 순서이다.

① 전쟁이 시작된 뒤 정전 협정이 체결되었다.

② 1948년 별도 정부 수립이 1950년 전쟁 발발보다 앞선다.

③ 남북의 분할 점령이 별도 정부 수립보다 앞선다.

④ 정전 협정은 제시된 사건 중 가장 나중이다.

다시 볼 곳: Q01·Q03

02 **정답 ④.** ㄱ은 지정학적 위치, ㄷ은 미국과 소련의 대립으로 국제적 요인이다.

① ㄴ과 ㄹ은 모두 민족 내부의 요인이다.

② 국제적 요인 ㄱ·ㄷ에 내부 요인 ㄹ을 추가했다.

③ 국제적 요인 ㄱ을 빠뜨리고 내부 요인 ㄴ·ㄹ을 포함했다.

⑤ 국제적 요인 ㄷ을 빠뜨리고 내부 요인 ㄴ을 포함했다.

다시 볼 곳: Q02

03 **정답 ③.** 전쟁의 상처와 적대감·불신의 심화는 심리적 분단에 해당한다.

① 군사적 대치는 군대가 서로 맞서 있는 상태이다. 제시문은 주민 사이의 마음의 거리에 초점이 있다.

② 지리적 분단은 38선을 기준으로 점령 구역이 나뉜 측면이다.

④ 정전은 전투를 멈춘 상태이며, 주민 사이의 불신을 가리키는 용어가 아니다.

⑤ 정치적 분단은 남북에 별도의 정부가 들어선 측면이다.

다시 볼 곳: Q03

04 **정답 ④.** 두 선은 만들어진 시기와 기준이 다르며 위치도 일치하지 않는다.

① 관련 시기를 서로 뒤바꾸었다.

② 두 선은 위치와 기준이 다르다.

③ 1945년 분할 점령이 1948년 별도 정부 수립보다 앞선다.

⑤ 군사 분계선은 서쪽에서는 38선보다 남쪽, 동쪽에서는 38선보다 북쪽을 지난다.

다시 볼 곳: Q03·Q04

---

05 **정답 ③.** 군사 분계선 B의 양쪽으로 각각 2km를 물러나 비무장 지대 A를 설정했다.

① 가·나는 이 그림에서 비무장 지대의 북방·남방 한계이며 38선이 아니다.

② A는 너비가 있는 구역이다.

④ B는 군사적 경계선으로 자유 통행 도로가 아니다.

⑤ 정전 협정은 전투를 멈추는 것이며 종전·평화의 완성과 같지 않다.

다시 볼 곳: Q04·Q05

---

06 **정답 ①.** 전쟁으로 가족의 죽음과 이별을 겪으며 적대감과 불신이 깊어졌으므로 심리적 분단의 심화와 연결된다.

② 점령 구역의 설정은 지리적 분단에 직접 해당한다. 전쟁의 피해로 불신이 깊어지는 것은 심리적 분단의 심화이다.

③ 38선을 기준으로 한 분할 점령은 지리적 분단이다. 정치적 분단은 1948년 별도 정부의 수립과 연결된다.

④ 정치적 분단의 대표 사건은 1948년 정부 수립이다. 1953년 정전은 전투를 멈췄지만 분단과 군사적 대치는 이어졌다.

⑤ 별도 정부의 수립은 정치적 분단과 연결된다. 지리적 분단의 대표 사건은 1945년 분할 점령이다.

다시 볼 곳: Q03

---

07 **정답 ①.** 직선 (가)는 38선이다. 1945년 광복 직후 미국과 소련이 이 위도를 기준으로 남북에 각각 진주했다.

② 굽은 (나)는 정전 당시의 군사적 접촉선을 바탕으로 정해졌다. 같은 위도를 잇는 것은 (가)이다.

③ 두 선의 관련 시기는 각각 1945년과 1953년이다. 1948년은 남북의 별도 정부 수립과 연결된다.

④ 1953년 정전 당시 군사적 접촉선을 바탕으로 정한 선은 (나) 군사 분계선이다.

⑤ 1945년 분할 점령 구역을 나눈 선은 (가) 38선이다. (나)는 1953년 군사 분계선이다.

다시 볼 곳: Q04

---

08 **정답 ③.** ㄱ·ㄷ이 옳다. 정전은 전투의 중지, 종전은 전쟁의 종결에 초점이 있다.

① ㄴ이 틀렸다. 남북의 별도 정부는 1948년에 수립되었고, 정전 협정은 전투 중지와 관련된다.

② ㄹ이 틀렸고 ㄱ이 빠졌다. 선의 설정만으로 종전과 안정적인 평화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할 수 없다.

④ ㄹ이 틀렸다. 군사 분계선 설정은 정전의 결과이며 종전이나 평화 체제의 완성과 같지 않다.

⑤ ㄴ이 틀렸고, 정전과 종전을 구별한 ㄱ이 빠졌다. 1948년 정부 수립과 1953년 정전을 구별해야 한다.

다시 볼 곳: Q03·Q05

---

09 **정답 ②.** ㄱ은 경계와 협력을 함께 고려한 태도이고, ㄹ은 당국·체제와 주민 개인을 구별한 태도이다.

① ㄷ이 틀렸다. 원인의 설명과 도덕적 정당화는 구별해야 한다.

③ ㄷ이 틀렸고 ㄱ이 빠졌다. 경계와 협력은 함께 가능하며, 인권 침해는 보편적 가치로 판단해야 한다.

④ ㄴ은 일부를 전체로 일반화했고, ㄷ은 원인을 이해하는 것과 옳다고 인정하는 것을 혼동했다.

⑤ ㄴ이 틀렸다. 최근 자료라도 한 지역의 모습으로 다른 지역이나 주민 전체를 단정할 수 없다.

다시 볼 곳: Q06·Q07·Q08·Q22

---

10 **정답 ④.** 일당 독재는 당으로의 권력 집중을, 수령 중심 체제는 그 당을 이끄는 최고 지도자로의 권력 집중을 강조한다.

① (가)는 군 우선의 통치 방식이 아니라 정당으로의 권력 집중이다. (나)도 사상의 내용보다 최고 지도자의 권력에 초점이 있다.

② 두 개념의 초점을 뒤바꾸었다. 한 정당으로의 집중은 일당 독재, 최고 지도자로의 집중은 수령 중심 체제이다.

③ (가)는 맞지만 (나)는 군대를 앞세우는 선군 정치가 아니라 최고 지도자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수령 중심 체제이다.

⑤ (가)는 통치 이념이 아니라 권력 구조이다. (나)는 집단의 이익보다 최고 지도자 중심의 권력 운영을 강조한다.

다시 볼 곳: Q09·Q10·Q14

---

11 **정답 ④.** (가)는 통치 이념인 주체사상, (나)는 군대를 중시하는 선군 정치이다.

① 생활 총화는 조직에서 생활을 돌아보고 평가하는 활동이며 (나)는 주체사상이 아니다.

② 두 용어를 서로 뒤바꾸었다.

③ 고난의 행군은 극심한 어려움을 견디도록 독려한 구호이며 (나)의 통치 방식과 다르다.

⑤ 집단주의는 집단 이익을 앞세우는 원칙이며 장마당은 시장이다.

다시 볼 곳: Q10·Q12·Q21

---

12 **정답 ②.** 중앙에서 생산 목표와 자원 배분을 계획하고 경제 단위가 따르게 한다는 점이 중앙 집권적 계획 경제의 특징이다.

① 공동 소유는 생산 수단을 누가 소유하는지에 관한 원칙이다. 제시문은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지를 누가 결정하는지에 초점이 있다.

③ 장마당의 시장 거래는 주민이 물품을 사고파는 활동이다. 제시문은 중앙의 계획에 따른 경제 운영을 설명한다.

④ 배급은 정해진 기준에 따라 물자를 나누어 주는 것이다. 제시문은 생산 목표와 자원 배분 계획의 결정 방식에 초점이 있다.

⑤ 주택 배정은 주거 생활의 제도이다. 제시문은 경제 전반의 생산 목표와 자원 배분을 계획하는 방식이다.

다시 볼 곳: Q11·Q12·Q19

---

13 **정답 ⑤.** 주요 생산 수단의 소유 원칙을 모든 생활용품의 소유 금지로 확대할 수 없다.

① 생산 수단의 뜻에 맞는 설명이다.

② 생산 수단의 예에 해당하므로 적절하다.

③ 주요 생산 수단과 생활용품을 구별한 적절한 판단이다.

④ 제도상 소유 원칙을 설명하므로 적절하다.

다시 볼 곳: Q11

---

14 **정답 ④.** 극심한 어려움을 이겨 내도록 동원한 구호가 고난의 행군이다.

① 경제를 중앙의 계획으로 관리하는 원칙이다.

② 사회를 수령 중심의 큰 가족처럼 설명하는 논리이다.

③ 조직에서 생활과 행동을 돌아보고 평가하는 활동이다.

⑤ 선군 정치는 군대를 앞세우는 통치 방식이다. 심각한 경제난을 견디도록 독려한 구호는 고난의 행군이다.

다시 볼 곳: Q12

---

15 **정답 ⑤.** 장마당에서 사고팔아 생활 물품과 돈을 마련하는 데 더 의존한다는 것은 주민 생활에서 시장 거래의 비중이 커졌다는 뜻이다.

① 자료의 주민들은 물건을 팔아 돈을 마련한다. 국가가 돈을 배급하는 방식의 확대라는 근거는 없다.

② 자료에서는 배급이 약해졌다고 했다. 커진 것은 주민이 시장 거래에 의존하는 정도이다.

③ 자료는 생활 물품을 마련하는 방식의 변화이다. 생산 수단의 소유 주체가 바뀌었다는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④ 주민의 시장 거래 확대를 국가가 거래량을 계획·배정하는 방식의 확대와 혼동했다.

다시 볼 곳: Q12·Q13

---

16 **정답 ②.** 수령을 아버지, 당을 어머니, 주민을 자녀에 비유하여 수령과 당에 대한 충성과 복종을 강조한다.

① 어머니는 당, 자녀는 주민에 비유한다. 두 대상을 뒤바꾸었다.

③ 아버지는 수령, 어머니는 당에 비유한다. 둘을 뒤바꾸었다.

④ 아버지·어머니·자녀의 대응을 모두 잘못 연결했다. 수령·당·주민의 순서이다.

⑤ 아버지는 수령, 자녀는 주민에 비유한다. 두 대상을 뒤바꾸었다.

다시 볼 곳: Q14

---

17 **정답 ②.** 공연과 보도를 통해 당의 이념과 정책을 알리고 받아들이게 하므로 예술·언론의 선전 기능을 보여 준다.

① 가족에 빗댄 통치 논리는 사회주의 대가정이다. 제시문에는 그런 비유가 없다.

③ 주민이 자신의 생활을 돌아보고 상호 평가하는 모임은 생활 총화이다. 제시문은 공연과 보도의 목적이다.

④ 군대를 앞세우는 것은 선군 정치이다. 제시문은 문화·언론의 목적과 기능이다.

⑤ 생산·자원 배분 계획은 중앙 집권적 계획 경제의 특징이다. 예술·언론의 선전 기능과 구별한다.

다시 볼 곳: Q15·Q21

---

18 **정답 ①.** 정책의 문제점을 평화적으로 말했다는 이유로 처벌했으므로 자유권 중 표현의 자유가 직접 침해되었다.

② 종교의 자유는 신앙을 갖거나 갖지 않을 자유이다. 제시문은 신앙이 아니라 정부 정책에 관한 의견이다.

③ 평등권은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이다. 제시문에서 직접 강조한 것은 의견 표현에 대한 처벌이다.

④ 생존권은 식량·의료 등 인간다운 기본 생활 조건에 초점이 있다. 제시문은 의견을 말한 데 대한 처벌이다.

⑤ 거주·이전의 자유는 거주지를 정하고 옮기는 자유이다. 제시문의 직접적 초점은 발언이다.

다시 볼 곳: Q16

---

19 **정답 ③.** 직접 생명을 빼앗는 (가)는 생명권, 식량·의료 등 기본 생활 조건의 부족을 강조한 (나)는 생존권에 초점이 있다.

① (가)는 맞지만 (나)는 의견 표현에 대한 제한이 아니라 기본 생활을 유지할 조건의 부족이다.

② 생명권과 생존권의 직접적 초점을 뒤바꾸었다. (가)는 생명을 빼앗는 행위, (나)는 기본 생활 조건의 문제이다.

④ (나)는 맞지만 (가)는 차별 여부보다 직접적인 생명 박탈에 초점이 있다.

⑤ (가)는 거주지 선택·이전이 아닌 생명 박탈이며, (나)는 특정 배경에 따른 차별보다 식량·의료의 부족을 강조한다.

다시 볼 곳: Q16

---

20 **정답 ⑤.** 규정과 실제 생활의 차이를 비교하므로 도구 ①을 적용한다. 신앙·종교 활동은 자유권 중 종교의 자유와 직접 관련된다. 교과서의 '정치적 권리 침해'라는 묶음은 참정권 침해만을 뜻하지 않는다.

① 당국의 입장과 주민의 생각을 비교한 자료가 아니다. 선거 등 정치 참여보다 종교의 자유를 다루고 있다.

② 제시문은 한 사례의 일반화가 아니라 규정과 실제의 차이이다. 식량·의료 등 생존권 문제도 아니다.

③ 제시문에는 제한이 생긴 원인을 도덕적 정당화로 바꾸는 주장이 없다. 종교 활동의 자유에 직접 초점이 있다.

④ 도구는 맞지만 종교 활동의 자유를 참정권과 혼동했다. 참정권은 정치 참여와 관련된다.

다시 볼 곳: Q08 뒤 판단 도구 표·Q16·Q17

---

21 **정답 ②.** 출신 성분은 배경, 당성은 충성의 정도를 뜻한다. 이를 교육·직업 등의 기회와 연결하면 부당한 차별이 생길 수 있다.

① (가)는 맞지만 생활 총화는 생활을 돌아보고 평가하는 모임이다. 충성의 정도를 가리키는 말은 당성이다.

③ 두 기준을 뒤바꾸었다. 가족·사회적 배경이 출신 성분, 당과 체제에 대한 충성의 정도가 당성이다.

④ 사회주의 대가정은 사회를 수령 중심의 가족에 빗댄 통치 논리이다. (가)는 출신 성분, (나)는 당성이다.

⑤ (나)는 맞지만 집단주의는 개인보다 집단의 이익을 앞세우는 원칙이다. 가족의 배경을 뜻하는 말은 출신 성분이다.

다시 볼 곳: Q18

---

22 **정답 ⑤.** ㄱ·ㄷ이 옳다. 제도상의 원칙과 실제 생활 여건·물품 마련 방법을 함께 보아야 한다.

① ㄴ이 틀렸다. 장마당에서 돈을 내고 곡식을 사는 것은 시장 거래이며 국가 배급과 구별된다.

② ㄹ이 틀렸고 ㄱ이 빠졌다. 집단주의라는 제도의 특징만으로 가족 간의 감정까지 부정할 수 없다.

③ ㄹ이 틀렸다. 집단주의를 강조하는 체제에서도 주민들은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가족 간의 정을 나눈다.

④ ㄴ이 틀렸고 ㄱ이 빠졌다. 시장에서의 구입과 국가 배급을 구별해야 한다.

다시 볼 곳: Q14·Q19

---

23 **정답 ①.** 12년제라는 제도, 사상 교육, 노동 동원의 영향을 구별해 이해한 ㄱ·ㄷ·ㄹ이 옳다.

② ㄱ·ㄷ은 옳지만 노동 동원의 영향을 설명한 ㄹ을 빠뜨렸다.

③ 옳은 ㄷ·ㄹ을 빠뜨리고 규정과 실제를 혼동한 ㄴ을 포함했다.

④ 옳은 ㄱ·ㄹ을 빠뜨리고 잘못된 ㄴ을 포함했다.

⑤ 옳은 ㄱ을 빠뜨리고 잘못된 ㄴ을 포함했다.

다시 볼 곳: Q20

---

24 **정답 ①.** 조직의 기준에 따라 생활과 행동을 돌아보고 서로 평가하는 것은 생활 총화이다. 주민의 행동·사상을 관리하는 성격이 강하다.

② 군 우선의 통치 방식은 선군 정치이다. 주체사상은 통치 이념이며, 제시된 모임은 생활 총화이다.

③ 사회주의 대가정은 수령·당·주민의 관계를 가족에 빗댄 통치 논리이다. 식량을 나누는 배급 활동이나 생활 총화의 이름이 아니다.

④ 생활 총화라는 이름은 맞지만, 자유롭게 선택하는 취미 모임이라는 설명이 틀렸다. 조직의 기준으로 행동을 평가·관리한다.

⑤ 집단주의는 개인보다 집단의 이익을 앞세우는 원칙이다. 생산 수단의 공동 소유와도 구별하며, 제시된 모임은 생활 총화이다.

다시 볼 곳: Q21

---

25 **정답 ②.** 북한에서의 생활 기반, 북한 이탈, 이탈 뒤 외국 국적 미취득이라는 조건을 함께 설명했다.

① 이탈 뒤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았다는 조건이 있다.

③ 부모의 출신 하나만으로 법의 모든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수 없다.

④ 입국 뒤에도 적응과 정착의 어려움이 남을 수 있다.

⑤ 이탈 이유는 사람마다 다르다.

다시 볼 곳: Q23·Q24

---

26 **정답 ①.** 취업과 소득은 경제적, 불안과 외로움은 심리적, 말과 생활 제도의 낯섦은 문화적 어려움에 초점이 있다.

② (나)는 맞지만 (가)와 (다)의 초점을 뒤바꾸었다.

③ 각 사례의 직접적 초점을 모두 잘못 연결했다.

④ (가)는 맞지만 (나)와 (다)의 초점을 뒤바꾸었다.

⑤ 경력·취업, 가족에 대한 감정, 말·제도의 초점을 서로 잘못 연결했다.

다시 볼 곳: Q24

---

27 **정답 ③.** (가)는 한 사람을 같은 출신의 학생 전체로, (나)는 일부 용어의 어려움을 전체 능력으로 일반화했다. 두 경우 모두 도구 ②가 직접 적용된다.

① 당국의 정책과 주민의 생각을 같게 보는 사례가 아니다. 한 사람·일부 능력에서 전체를 짐작한 문제이다.

② 원인을 설명한 뒤 잘못을 정당화하는 주장은 제시되지 않았다. 일부 관찰에서 전체를 단정한 문제이다.

④ 제시문에는 제도나 당국 정책이 나오지 않는다. 부분적 경험으로 사람의 성격과 능력을 단정하는 문제를 먼저 살펴야 한다.

⑤ 두 판단은 제도·규정과 실제 보장의 차이를 따지는 사례가 아니다. 관찰 범위를 넘어 일반화한 것이 공통 문제이다.

다시 볼 곳: Q08 뒤 판단 도구 표·Q25·Q26

---

28 **정답 ④.** ㄱ·ㄷ이 옳다. A는 선택과 생활 능력을 지원하고, B는 차이를 존중하며 함께 살아갈 관계와 규칙을 만든다.

① ㄴ이 틀렸고 ㄱ이 빠졌다. 당사자의 선택을 돕는 훈련과 정보 제공은 자립을 지원할 수 있다.

② ㄴ이 틀렸다. 자립은 도움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필요한 지원을 바탕으로 스스로 선택하고 살아갈 힘을 갖추는 것이다.

③ ㄹ이 틀렸고 ㄱ이 빠졌다. B는 차이를 없애려는 계획이 아니며 A의 지원도 자립과 연결된다.

⑤ ㄹ이 틀렸다. 사회 통합은 말투와 생활 방식을 같게 만드는 일이 아니라 차이를 존중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다시 볼 곳: Q27·Q28

---

29 **정답:** (가) 지정학적 / (나) 신탁 통치.

(가)는 지리적 위치와 국제 정치·안보의 관계에, (나)는 국제적 감독 아래 일정 기간 통치를 맡는 방식에 초점이 있다. (가)의 빈칸 뒤에 '위치'가 있으므로 '지정학적'이라고 쓰면 된다.

다시 볼 곳: Q02

---

30 **정답:** (가) 생산 수단 / (나) 자립.

생산 수단과 개인의 옷 같은 생활용품을 구별한다. 자립은 아무 도움도 받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꾸려 갈 힘을 갖추는 것이다.

다시 볼 곳: Q11·Q27

---

31 **정답:** (가) 문화적 / (나) 심리적 / (다) 경제적.

제도와 이용 방법의 낯섦, 가족에 대한 감정, 생활 소득의 부족을 각각 직접 강조했다. 실제 생활에서는 세 어려움이 서로 이어질 수 있다.

다시 볼 곳: Q24

---

32 **정답:** (가) 평등권 / (나) 생명권 / (다) 생존권(사회권).

출신 배경에 따른 부당한 차별, 직접적인 생명 박탈, 식량·의료 등 기본 생활 조건의 부족을 구별한다. 한 사건에 여러 권리가 관련될 수 있으나 이 문제는 각 문장의 직접적 초점을 묻는다.

다시 볼 곳: Q16·Q18

---

33 **정답:** (가) O / (나) X / (다) O.

(나) '38선의 위도만을 뜻한다'를 **'남북 사이의 적대감과 불신 등 마음의 거리를 뜻한다'**로 고친다.

(가) 정전은 전투를 멈춘 합의이지 평화의 완성과 같은 뜻은 아니다. (다) 영역의 분할과 별도 정부의 수립은 구별할 수 있다.

인정 기준: (나)에 '적대감', '불신', '마음의 거리' 등 심리적 갈등을 나타내는 설명이 있으면 인정한다.

다시 볼 곳: Q03·Q05

---

34 **정답:** (가) O / (나) X / (다) O.

(나) '모두 같다고 보아야 한다'를 **'모두 같다고 단정할 수 없다'**로 고친다.

(가) 상황의 이해와 도덕적 정당화는 다르다. (다) 필요한 지원과 당사자의 선택권 존중은 함께 가능하다.

인정 기준: (나)에 당국의 정책을 주민 전체의 생각으로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 드러나면 인정한다.

다시 볼 곳: Q06·Q08·Q22·Q27

35

모범 답안: 시장 거래가 확대되어도 국가 통제가 함께 남을 수 있으므로, 장마당의 존재만으로 완전한 시장 경제로 바뀌었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인정 기준: '시장 거래'와 '국가 통제'를 포함하고, 두 요소가 함께 나타날 수 있어 전체 체제의 전환을 단정할 수 없다는 뜻이 드러나면 인정한다. '시장이 있으니 완전히 바뀌었다'거나 '북한에는 시장 거래가 없다'는 답은 인정하지 않는다.

다시 볼 곳: Q11·Q13

36

모범 답안: 출신만으로 능력을 단정하지 않고, 이미 아는 내용을 인정하면서 학습 공백과 낯선 용어를 확인해 보충하려 했기 때문이다.

인정 기준: '학습 공백'과 '출신'을 포함하고, 출신에 따른 일반화를 피하면서 학생의 실제 학습 상태에 맞춰 지원한다는 뜻이 드러나면 인정한다. '출신 때문에 능력이 낮으므로'라는 설명이나 '답을 대신 써 주면 되므로'라는 설명은 인정하지 않는다.

다시 볼 곳: Q26